

이용섭 시장 “평동 개발, 시 발전·시민 이익 부합돼야”

시정질문서 밝혀...“아파트 중심 난개발·특혜시비 있을 수 없어” 신수정 의원 “토지매입 난항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차질 우려”

광주시의 역점 추진 사업인 인공지능(AI) 집적 단지 조성 사업이 토지 매입 단계부터 난항을 보이면서 차질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신수정(민주·북구 3) 의원은 30일 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토지 보상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며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토지 소유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광주시는 조성 부지인 첨단 3지구에 대한 실시계획 고시 이전부터 토지 소유주와 소통도 없이 별도로 토지 매매, 건축 허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 등 밀실 행정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 집적단지 핵심 시설인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사업자로 NHN이 선정된 것을 두고는 “BOO(민간이 주도해 소요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 하는 것) 방식으로 NHN을 선정된 것은 데이터센터를 민간에게 넘기는 것이다”며 NHN 주도가 아닌 공공성 확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보고서에 따르면 100PF(페타플롭스) 성능을 갖춘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는 기술은 국내에 아직 개발되

지 않았다”며 “(NHN이 계획하는)88.9PF 성능을 지난 세계 10위권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정말 가능한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공급대책이 전무한데도 부지마련도 요원한 상황에서 데이터센터 조기착공이 실로 가능할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첨단 3지구에 2024년까지 데이터센터, 실증 장비, 연구개발 시설, 창업 기관 등이 들어서는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반재신(민주·북구1) 의원이 질의한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 관련 “시 발전과 시민 이익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면서 “아파트 중심의 난개발과 특혜시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사업의 원래 목적인 한류 콘텐츠 거점 도시 조성 능력이 있는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참여가 보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류 콘텐츠 조성에는 1조8000억원이 들어간다”며 “(사업자가) 수익 사업의 하나로 아파트를 흔히 생각하는 데 주상복합 8300세대는 너무 많다. 공



30일 오전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신수정 의원이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에 대한 시정 질의를 하고 있다.

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세대수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광주시는 1998년 조성된 평동 준공업지역을 한류 문화콘텐츠를 가미한 미래 전략 산업 거점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최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한류 문화콘텐츠를 만들고, 체험하고, 공유하는 복합 플랫폼 도시 조성’을 컨셉트로 1만5000석 규모 공연장, 스튜디오, 교육·창업 지원 시설 등을 21만㎡ 부지에 설치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월 최대 1만원 절약” 공동주택 태양광 광주시, 820가구 모집

광주시는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지원 사업에 참여할 820여 가구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발코니에 태양광 패널, 패널 거치대, 마이크로 인버터를 설치하면 한 달에 30kW 안팎의 전기 생산으로 월 6천원에서 1만원까지 전기 요금을 아낄 수 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330W 소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 62만여원 중 보조금 47만여원을 지원받는다.

광주시는 아파트 경비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경비실 옥상에 설치하는 소형 태양광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단지 내 다수가 참여하면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추가 지원액은 1개 단지 20가구 이상은 10만원, 10가구 이상 5만원, 5가구 이상 3만원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농촌에서 살아보기’ 본격 운영 전남도, 63가구 285명 접수

전남도는 귀농귀촌을 바라는 전국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전남도의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를 벤치마킹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신규 사업이다. 도시민이 농촌에 살아보면 농촌문화를 이해하고 주민과 소통하며 귀농귀촌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시작했다.

전국 9개 광역, 89개 시·군에서 500가구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63가구 285명이 접수했다. 이 중 보성군 다함울림촌체험마을은 7명의 참가자를 최종 선정해 지난 29일 살아보기 관계자들과 간소한 환영식을 마쳤다.

참가자에게는 개인당 월 30만원의 참가 연수비를 지원한다. 또 최장 6개월 기간으로 농촌생활 적응에 연착륙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각종 체험, 영농교육 등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가자의 만족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예정이다.

농촌인력개발센터가 맞춤형 일자리도 제공하는 등 단순 체험이 아닌, 참가자가 농촌에서 일하면서 스스로 자립할 기회도 제공한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참가자들이 일자리를 포함해 농촌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귀농귀촌의 알짜배기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준비를 꼼꼼히 하겠다”며 “누구나 꿈꾸는 행복한 귀농산어촌 1번지, 전남 살현의 마중물이 되도록 착실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17개 업체 에너지 융복합단지 특화기업 지정

광주·전남 에너지산업 융복합 단지 기업 중 17곳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에너지 특화기업으로 지정됐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국 6개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 84개 기업이 신청한 특화 기업 지정에서 광주 22개 기업 중 17곳이 포함됐다.

해당 기업은 지방세 감면,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2% 가산, 산업부 기술개발과제 주관기관 참여 시 2점 이내의 가점 지원 등 혜택을 받게 된다.

특화 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세제 지원, 국공유 재산 특례,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이 가능하게 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손경중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지정된 기업들의 협업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과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탈락한 기업도 하반기에 추가로 지정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소상공인 지원’ 광주 공공 배달앱 시범운영...가입비·광고료 면제

다음달부터...수수료 2% 적용

광주 공공 배달 앱이 4월 1일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공공 배달 앱을 활용하는 가맹점은 가입비와 광고료 부담이 전혀 없다. 중개 수수료는 2% 적용되며 그 절반은 소비자 페이백으로 적립된다. 대규모 민간 배달앱의 중개수수료가 6.8~12.5%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저렴한 수

준이라고 광주시는 전했다.

소비자는 최대 10% 할인 구매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4월까지 구매고객에게는 선착순으로 5000원 할인 쿠폰, 매주 수요일 구매고객에게는 선착순으로 3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가맹점 가입은 ‘광주 공공 배달 홈페이지’ (<http://광주공공배달.kr>)에 접속해 상담 신청을 하고 상담 후 ‘위메프오’에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영

입신고증 등 필수 서류와 정보를 등록하면 할 수 있다.

소비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휴대전화에서 ‘위메프오’ 앱을 다운로드해 가입하면 된다.

광주시는 7월 정식 출시 전까지 발생한 문제를 보완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배달 서비스도 추가해 온라인 주문으로 전통시장 상품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SNS 허위사실 피해, 법률서비스 받으세요”

광주시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운영 변호사 6명 권리구제 등 도움 제공

광주시는 “사회관계망 온라인서비스(SNS)상 가짜뉴스 등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전국 광역자치체 중 최초로 도입한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은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권리침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을 대상으로 법률적 권리구제 상담 및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시는 2019년 말부터 광주지방변호사회 등 관련 기관 사전협의 및 자체 내부 검토를 거쳐 지원 범위·대상 등을 정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단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법률지원단은 광주를 중심으로 각 분야에 풍부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지원단원 6명이 문 제해결이 절실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각종 SNS상의 허위사실이나 가짜뉴

스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시민은 누구나 의향광주법률지원단(062-613-2774)에 상담 및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면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의 상담 및 소송대리 등 권리구제에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된다.

다만 무료법률상담실, 행정심판국선대리 제도, 법률홈닥터 등 기존 법률지원제도에서 이용 가능한 일반 법률지원은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정 광주시 법무담당관은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제도를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개인의 권리와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창립
40th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 정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고 70%

대출한도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80%

대출한도

부동산 담보대출

(최고 50억원 한도)

최고 2,000

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햇 살 론

MG 대광새마을금고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각종 공제(암상해 화재 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요가·노래)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지산지점 | 062)222-1431